민주 광주 서구청장 공천 골머리

"젊은 피 수혈해야" vs "인지도 높은 후보 공천"

비민주 단일후보 카드 따라 공천시기 달라질 듯

다음달 27일 치러지는 서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에서는 비민주당 단일후보 카드로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린다는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은 10여명 이상 난립하는 구도여서 공천을 잘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과 함께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당권 경쟁 와중에서도 지역 민심의 동향을 주시하며 후보군 압축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 시기**=현재로서는 유동적이다. 우선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등의 비민주당 단일후보 성사 여부에 따라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비민주당 단일후보 카드가 구체화된다면 민주당은 현재의 비상대책위 구도에서 이달 내에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

후보 공천이 늦어질 경우, 비 민주당 성향이 비교적 강한 서구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판세가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도부 선출 이후, 후보를 선정한다면 대표 및 최고위원 성향에 따른 정치적 공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비민주당 단일후보 카드 마련이 진통을 겪을 경우,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새로이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공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비대위가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2~3배수로 압축하고 새로이 선출된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젊은피' vs '인지도'**=민주당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젊은피 수혈과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당내에서는 비민주당 단일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과감한 젊은피 수혈을 통해 정면 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공천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지난 서구청장 선거 패배는 인지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행정 관료 출신 등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컷-오프를 통해 개혁적 성향의 후보와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4명 정도로 압축해서 최종적인 후보 공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조되는 공천 전쟁**=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공천 입지자들이 갈수록 늘어가면서 치열한 '공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고위공무원단인 2급까지 오르며 토종 공무원의 내공을 보여왔던 조용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이 조만간 공직 사퇴와 함께 서구청장 보궐선거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도 12일 민주당 입당과 함께 출마 채비를 갖추고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또한, 박혜자 호남대 교수도 여성 프리미엄과 참신성을 무기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광주의 젊은 피인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과 신현구 민주당 중앙위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

또한,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김종식·이정일 전 서구청장, 김선옥·박금자·조광향 전 광주시의원, 고재청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등도 예비 등록을 마치고 공천 전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천 후보자는 10명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13일 오후 대전 서구 평송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연설회에 앞서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선·이인영, 누구와 손잡을까

민주 당권레이스 합종연횡 따라 희비 엇갈려

1인2표제 변수로… 시·도당위원장 혼전세

민주당의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도당 개편대회가 진행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대표주자인 박주선 의원과 486 단일 후보로 추대된 이인영 전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 시·도당 중 처음으로 열린 광주시당위원장 선거는 애초 정세균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강기정 의원의 우위가 전망됐지만 투표 결과, 손학규 전 대표 지지를 직·간접으로 선언했던 비주류 측 김재균 의원이 강 의원을 11.7%포인트(52표)라는 적지 않은 득표율 차이로 승리했다. 당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바람을 일으켜 '대세론'을 만들려던 정 전 대표 측의 전대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반면 부산시당의 12일 개편대회에서는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인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조경태 의원을 누르고 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반(反) 정세균'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정동영 상임고문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인 최 전 비서관이 현역인 조 의원을 이긴 것은 부산 내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지역위원장이 적지 않게 포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자 대결 구도를 보였던 경남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정 전 대표의 지원을 받은 송인배 후보가 손 전 대표 쪽으로 분류되는 백두현 후보에게 패배했다.

13일 열린 대전시당과 충남도당 개편대회에서는 박범계 후보와 양승조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와 무투표 당선됨으로써 당권주자 간 희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같이 당권 레이스가 가열되면서 이른바 '빅3'와 경쟁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과 이인영 전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의원 1명이 2표를 행사하는 전당대회 투표방식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합종연횡의 국면에서 이들이 어느 당권주자와 손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구민주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은 빅3 중 손학규 상임고문과 손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호남이 기반인 박 의원과 경기도 출신인 손 전 대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날 486 단일후보로 추대된 이 전 의원은 두터운 인간관계와 뚜렷한 진보 색채로 당 안팎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비록 최재성 의원이 단일화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국의 486 조직이 움직일 경우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 빅3 중 누구와 손을 잡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구의회 폐지 조항 삭제

지방행정계편추에 위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4인 협상위원회'는 구(區)의회 폐지 여부를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위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됐던 구의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민주당 전병헌·조영택 의원으로 구성된 협상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구의회 폐지 조항은 담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협상위는 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위원 27명 중에서 국회 추천 몫의 경우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대신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도 애초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정 의견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간의 간담회를 거쳐 법사위에 제출되며, 법사위는 수정 의견이 넘어오면 법안을 수정한 뒤 16일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의회 폐지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발족 후 마련될 종합기본계획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종합기본계획의 보고 시한이 2012년 6월까지인만큼 구의회 폐지는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며 "특히 국민 다수가 구의회폐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폐지가 물 건너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쟁점법안 야당과 협의한다

각종 정책 발표전 여야정책위장에 보고

정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야당과도 당정협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차관급이 주로 참석했던 예산 및 법안 소위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들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청와대의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정부의 이재오 특임장관과 임채민 총리실장 등은 지난 12일 저녁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 부재로 당정청에서 모두 8명이 참석한 이날 회동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우선 정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직접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필요한 경우, 장관이 예산이나 법안 소위에 직접 참석해 예산, 법안의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여야 정책위의장에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야당과도 당정협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회동,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후임 총리 인선과 관련,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 총리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리 후보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공정사회 기준' 공천에도 적용

한나라당은 공천 등 당 인사 과정에서 '공정사회'에 부합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첫 단계로 12개 사고지역 당협위원장 선정에서의 심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12일 "내달초 사고 당협위원장 공모에 앞서 이달 말께 새 기준을 공표할 것이며, 그 기준은 구체적이고 엄격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조직강화특위는 성범죄,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파렴치범에 해당하는 후보를 심사대상에서 배제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며, 추후 심사 과정에서 적용될 구체적 기준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최근 대폭 개선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참고해 각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 세금 납부실적, 전과, 주변 문제 등을 두루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